

「복지 부문 국정쇄신」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조사개요

1. 조사응답자수: 1,220명
2. 조사기간: 2010. 6. 10 - 6. 16
3. 조사방법: 전화조사
4. 조사내용
 - ▶ 현 정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의 균형수준
 - ▶ 증세 및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 ▶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
 - ▶ 가계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 ▶ 주택가격 관련 정부 정책 방향
 - ▶ 보육료 및 학교급식의 대상자 확대 수준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혜택 및 부담 수준
 - ▶ 미·비취업 청년의 일자리 문제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균형도(경제정책 vs. 복지정책)

- 현 정부가 복지보다 경제위주의 정책 수행한다는 인식이 대부분
-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인식 강함

〈표 1-1〉 현 정부의 복지정책 균형도(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지나치게 경제위주 정책수행	대체로 경제위주 정책수행	지나치게 복지위주 정책수행	대체로 복지위주 정책수행	계(수)
20-29세	31.9(69)	62.0(134)	4.6(10)	1.4(3)	100.0(216)
30-39세	36.1(95)	51.3(135)	11.8(31)	0.8(2)	100.0(263)
40-49세	28.4(76)	55.6(149)	13.8(37)	2.2(6)	100.0(368)
50-59세	23.3(49)	55.7(117)	16.7(35)	4.3(9)	100.0(210)
60-69세	13.3(16)	54.2(65)	26.7(32)	5.8(7)	100.0(120)
70세 이상	8.9(9)	44.6(45)	38.6(39)	7.9(8)	100.0(101)
전체	26.7(314)	54.8(645)	15.6(184)	3.0(35)	100.0(1,178)

— 고소득층일수록 경제위주의 정책으로 인식

〈표 1-2〉 현 정부의 복지정책 균형도(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지나치게 경제위주 정책수행	대체로 경제위주 정책수행	지나치게 복지위주 정책수행	대체로 복지위주 정책수행	계(수)
100만원 미만	14.2(17)	50.0(60)	27.5(33)	8.3(10)	100.0(120)
100-200만원 미만	26.9(50)	48.9(91)	20.4(38)	3.8(7)	100.0(186)
200-300만원 미만	28.9(70)	53.3(129)	15.7(38)	2.1(5)	100.0(242)
300-400만원 미만	26.4(68)	60.5(156)	10.1(26)	3.1(8)	100.0(258)
400-500만원 미만	30.7(46)	54.7(82)	12.7(19)	2.0(3)	100.0(150)
500만원 이상	30.3(57)	57.5(108)	11.7(22)	0.5(1)	100.0(188)
전체	26.9(308)	54.7(626)	15.4(176)	3.0(34)	100.0(1,144)

2. 증세·복지향상 vs. 감세·복지저하에 대한 의견

- 증세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의견이 과반수(52.9%)
 - 도시지역일수록 증세와 복지수준 향상 선호

〈표 2-1〉 증세 복지향상 vs. 감세 복지저하에 대한 의견(도시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증세하여 복지수준 향상	현재의 세금복지수준 적정	복지수준 낮아져도 감세	기타	계(수)
대도시	54.4(303)	25.7(143)	19.4(108)	0.5(3)	100.0(557)
중소도시	54.7(274)	21.8(109)	22.6(113)	1.0(5)	100.0(501)
농어촌	41.9(65)	31.6(49)	25.8(40)	0.7(1)	100.0(155)
전체	52.9(642)	24.8(301)	21.5(261)	0.7(9)	100.0(1,213)

– 젊은 층일수록 증세와 복지수준 향상 선호하고, 고령층에서는 감세 선호

〈표 2-2〉 증세 복지향상 vs. 감세 복지저하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증세하여 복지수준 향상	현재의 세금복지수준 적정	복지수준 낮아져도 감세	기타	계(수)
20-29세	61.2(134)	25.1(55)	13.7(30)	-	100.0(219)
30-39세	62.6(167)	22.1(59)	13.9(36)	1.9(5)	100.0(267)
40-49세	53.3(146)	24.5(67)	21.2(58)	1.1(3)	100.0(274)
50-59세	42.8(92)	28.8(62)	27.9(60)	0.5(1)	100.0(215)
60-69세	46.8(59)	24.6(31)	28.6(36)	-	100.0(126)
70세 이상	39.3(44)	24.1(27)	36.6(41)	-	100.0(112)
전체	52.9(642)	24.8(301)	21.5(261)	0.7(9)	100.0(1,213)

— 고소득층일수록 증세와 복지수준 향상 선호

〈표 2-3〉 증세 복지향상 vs. 감세 복지저하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증세하여 복지수준 향상	현재의 세금복지수준 적정	복지수준 낮아져도 감세	기타	계(수)
100만원 미만	37.1(49)	24.2(32)	38.6(51)	-	100.0(132)
100-200만원 미만	50.3(97)	24.9(48)	24.9(48)	-	100.0(193)
200-300만원 미만	51.0(127)	24.1(60)	23.3(58)	1.6(4)	100.0(249)
300-400만원 미만	58.4(153)	23.7(62)	17.2(45)	0.8(2)	100.0(262)
400-500만원 미만	59.6(90)	25.2(38)	13.3(20)	2.0(3)	100.0(151)
500만원 이상	58.6(112)	24.6(47)	16.8(32)	-	100.0(191)
전체	53.3(628)	24.4(287)	21.6(254)	0.8(8)	100.0(1,178)

3. 최우선적 해결과제

- 청년실업, 양극화, 사교육비를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인식

〈표 3-1〉 최우선적 해결과제(도시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저출산	양극화	청년 실업	의료비	사교 육비	주거비	기타	계(수)
대도시	15.0(84)	19.3(108)	35.5(199)	4.8(27)	19.4(109)	4.8(27)	1.3(7)	100.0(561)
중소도시	11.7(59)	22.1(111)	36.6(184)	4.0(20)	18.5(93)	5.0(25)	2.2(11)	100.0(503)
농어촌	12.8(20)	16.7(26)	35.3(55)	9.0(14)	21.2(33)	3.9(6)	1.3(2)	100.0(156)
전체	13.4(163)	20.1(245)	35.9(438)	5.0(61)	19.3(235)	4.8(58)	1.6(20)	100.0(1,221)

– 20대는 청년실업문제, 30-40대는 사교육비를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인식

〈표 3-2〉 최우선적 해결과제(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저출산	양극화	청년 실업	의료비	사교 육비	주거비	기타	계(수)
20-29세	10.9(24)	22.7(50)	47.7(105)	5.9(13)	7.7(17)	3.2(7)	1.8(4)	100.0(220)
30-39세	16.9(45)	24.3(65)	22.5(60)	2.6(7)	24.7(66)	7.5(20)	1.5(4)	100.0(267)
40-49세	8.3(23)	21.0(58)	31.5(87)	3.3(9)	31.9(88)	2.9(8)	1.1(3)	100.0(276)
50-59세	14.3(31)	20.3(44)	42.4(92)	4.2(9)	12.9(28)	4.2(9)	1.8(4)	100.0(217)
60-69세	14.8(19)	10.9(14)	44.5(57)	4.7(6)	16.4(21)	6.3(8)	2.3(3)	100.0(128)
70세 이상	18.8(21)	12.5(14)	33.0(37)	15.2(17)	13.4(15)	5.4(6)	1.8(2)	100.0(112)
전체	13.4(163)	20.1(245)	35.9(438)	5(61)	19.3(235)	4.8(58)	1.6(20)	100.0(1,220)

– 저소득층은 청년실업과 의료비의 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 최우선적 해결과제(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저출산	양극화	청년 실업	의료비	사교 육비	주거비	기타	계(수)
100만원 미만	14.4(19)	9.1(12)	38.6(51)	11.4(15)	17.4(23)	5.3(7)	3.8(5)	100.0(132)
100-200만원 미만	14.7(29)	16.2(32)	36.0(71)	7.6(15)	18.8(37)	5.1(10)	1.5(3)	100.0(197)
200-300만원 미만	11.2(28)	22.9(57)	33.7(84)	4.8(12)	20.9(52)	4.8(12)	1.6(4)	100.0(249)
300-400만원 미만	13.7(36)	22.1(58)	35.5(93)	3.1(8)	19.9(52)	4.2(11)	1.5(4)	100.0(262)
400-500만원 미만	11.2(17)	21.1(32)	36.2(55)	2.6(4)	21.7(33)	5.9(9)	1.3(2)	100.0(152)
500만원 이상	15.0(29)	24.9(48)	33.7(65)	3.6(7)	17.6(34)	4.2(8)	1.0(2)	100.0(193)
전체	13.3(158)	20.2(239)	35.4(419)	5.2(61)	19.5(231)	4.8(57)	1.7(20)	100.0(1,185)

4.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교육비, 주거비 제외)

- 난방연료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가 가장 부담으로 작용
- 농촌지역에서는 난방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표 4-1〉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도시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식료 품비	보건 의료비	전기 요금	교통비	통신비	난방 연료비	의복 가사 용품 구입비	기타	계(수)
대도시	24.6(138)	16.8(94)	6.1(34)	6.8(38)	13.9(78)	24.4(137)	6.2(35)	1.3(7)	100.0(561)
중소도시	23.7(119)	16.7(84)	5.8(29)	6.0(30)	12.7(64)	27.4(138)	6.2(31)	1.6(8)	100.0(503)
농어촌	16.0(25)	16.0(25)	10.3(16)	5.8(9)	7.0(11)	41.7(65)	2.6(4)	0.6(1)	100.0(156)
전체	23.1(282)	16.6(203)	6.5(79)	6.3(77)	12.5(153)	27.9(340)	5.7(70)	1.3(16)	100.0(1,220)

– 젊은 층일수록 식료품비가 높고, 고령층일수록 난방연료비와 보건의료비가 높은 비율

〈표 4-2〉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전기요금	교통비	통신비	난방연료비	의복가사용품구입비	기타	계(수)
20-29세	27.7(61)	12.3(27)	11.4(25)	6.8(15)	13.2(29)	17.3(38)	10.0(22)	1.4(3)	100.0(220)
30-39세	31.1(83)	9.7(26)	3.8(10)	10.1(27)	10.9(29)	27.7(74)	5.6(15)	1.1(3)	100.0(267)
40-49세	25.5(73)	10.5(29)	4.0(11)	5.8(16)	19.6(54)	25.0(69)	7.6(21)	1.1(3)	100.0(276)
50-59세	16.1(35)	15.7(34)	6.9(15)	5.5(12)	15.7(34)	36.9(80)	2.3(5)	0.9(2)	100.0(217)
60-69세	16.4(21)	30.5(39)	5.5(7)	3.1(4)	4.7(6)	33.6(43)	4.7(6)	1.6(2)	100.0(128)
70세 이상	8.0(9)	42.9(48)	9.8(11)	2.7(3)	0.9(1)	32.1(36)	0.9(1)	2.7(3)	100.0(112)
전체	23.1(22)	16.6(23)	6.5(79)	6.3(77)	12.5(153)	27.9(340)	5.7(70)	1.3(16)	100.0(1,220)

－ 난방연료비와 보건의료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교통, 통신, 의복
가사용품비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음

〈표 4-3〉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식료 품비	보건 의료비	전기 요금	교통비	통신비	난방 연료비	의복 가사 용품 구입비	기타	계(수)
100만원 미만	12.1(16)	35.6(47)	8.3(11)	3.0(4)	4.6(6)	34.1(45)	0.8(1)	1.5(2)	100.0(132)
100-200만원 미만	16.2(32)	25.4(50)	4.6(9)	5.1(10)	7.1(14)	38.1(75)	3.1(6)	0.5(1)	100.0(197)
200-300만원 미만	23.7(59)	12.9(32)	6.4(16)	6.0(15)	13.3(33)	31.3(78)	4.8(12)	1.6(4)	100.0(249)
300-400만원 미만	27.9(73)	15.7(41)	6.1(16)	6.5(17)	13.4(35)	22.9(60)	6.1(16)	1.5(4)	100.0(262)
400-500만원 미만	23.0(35)	8.6(13)	7.9(12)	7.9(12)	16.5(25)	27.0(41)	8.6(13)	0.7(1)	100.0(152)
500만원 이상	29.0(56)	9.3(18)	4.7(9)	8.3(16)	18.1(35)	17.6(34)	10.9(21)	2.1(4)	100.0(193)
전체	22.9(27)	17.0(20)	6.2(7)	6.2(7)	12.5(14)	28.1(33)	5.8(6)	1.4(1)	100.0(1,185)

5.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집값하락 vs. 하락방지)

- 정부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하락 유도 찬성이 62.9%
 -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집값 하락 유도 지지층이 높은 비율

〈표 5-1〉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도시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정부 규제강화, 집값 하락 유도	정부 규제철폐, 집값 하락 방지	계(수)
대도시	61.4(336)	38.6(211)	100.0(547)
중소도시	62.1(310)	37.9(189)	100.0(499)
농어촌	70.5(110)	29.5(46)	100.0(156)
전체	62.9(756)	37.1(446)	100.0(1,202)

－ 20-30대일수록 집값 하락에 찬성

〈표 5-2〉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정부 규제강화, 집값 하락 유도	정부 규제철폐, 집값 하락 방지	계(수)
20-29세	61.6(133)	38.4(83)	100.0(216)
30-39세	69.4(184)	30.6(81)	100.0(265)
40-49세	58.6(161)	41.5(114)	100.0(275)
50-59세	66.8(143)	33.2(71)	100.0(214)
60-69세	60.5(75)	39.5(49)	100.0(124)
70세 이상	55.6(60)	44.4(48)	100.0(108)
전체	62.9(756)	37.1(446)	100.0(1202)

－ 고소득층일수록 집값 하락 방지 찬성

〈표 5-3〉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정부 규제강화, 집값 하락 유도	정부 규제철폐, 집값 하락 방지	계(수)
100만원 미만	60.5(78)	39.5(51)	100.0(129)
100-200만원 미만	62.5(120)	37.5(72)	100.0(192)
200-300만원 미만	70.9(175)	29.2(72)	100.0(247)
300-400만원 미만	64.1(164)	35.9(92)	100.0(256)
400-500만원 미만	53.3(81)	46.7(71)	100.0(152)
500만원 이상	60.9(117)	39.1(75)	100.0(192)
전체	62.9(735)	37.1(433)	100.0(1,168)

6.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 약 1/3이 현행과 같이 저소득층에만 국한 지원 찬성
 - 20대는 맞벌이 중산층으로의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6-1〉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만	맞벌이 중산층	모든 중산층	맞벌이 상관없이 모든 계층	계(수)
20-29세	30.9(68)	31.8(70)	17.3(38)	20.0(44)	100.0(220)
30-39세	24.0(64)	24.7(66)	22.1(59)	29.2(78)	100.0(267)
40-49세	33.3(92)	23.2(64)	15.2(42)	28.3(78)	100.0(276)
50-59세	45.2(98)	27.7(60)	10.6(23)	16.6(36)	100.0(217)
60-69세	33.6(43)	31.3(40)	14.1(18)	21.1(27)	100.0(128)
70세 이상	39.1(43)	23.6(26)	16.4(18)	20.9(23)	100.0(110)
전체	33.5(408)	26.8(326)	16.3(198)	23.5(286)	100.0(1,218)

－ 가구원수(자녀수)가 많을수록 지원확대 지지

〈표 6-2〉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한 의견(가구원수별)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만	맞벌이 중산층	모든 중산층	맞벌이 상관없이 모든 계층	계(수)
1인	27.7(23)	25.3(21)	18.1(15)	28.9(24)	100.0(83)
2인	40.4(92)	25.9(59)	14.0(32)	19.7(45)	100.0(228)
3인	35.8(87)	31.7(77)	11.9(29)	20.6(50)	100.0(243)
4인	32.4(155)	24.3(116)	18.4(88)	24.9(119)	100.0(478)
5인 이상	27.6(51)	28.1(52)	18.4(34)	26.0(48)	100.0(185)
전체	33.5(408)	26.7(325)	16.3(198)	23.5(286)	100.0(1,217)

7.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 무상급식 지지층이 약 60%
 -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지지층 비율 높음

〈표 7-1〉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도시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 실시	소득계층 상관없이 전체계층	계(수)
대도시	43.6(243)	56.4(314)	100.0(557)
중소도시	38.3(192)	61.7(309)	100.0(501)
농어촌	34.6(53)	65.4(100)	100.0(153)
전체	40.3(488)	59.7(723)	100.0(1,211)

－ 가구원수(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상급식 지지

〈표 7-2〉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가구원수별)

(단위: %, 명)

구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 실시	소득계층 상관없이 전체계층	계(수)
1인	48.8(41)	51.2(43)	100.0(84)
2인	48.2(108)	51.8(116)	100.0(224)
3인	43.8(106)	56.2(136)	100.0(242)
4인	37.7(180)	62.3(297)	100.0(477)
5인 이상	29.0(53)	71.0(130)	100.0(183)
전체	40.3(488)	59.7(722)	100.0(1,210)

－ 저소득층일수록 선별적 지원 찬성

〈표 7-3〉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 실시	소득계층 상관없이 전체계층	계(수)
100만원 미만	50.8(66)	49.2(64)	100.0(130)
100-200만원 미만	46.4(91)	53.6(105)	100.0(196)
200-300만원 미만	35.2(87)	64.8(160)	100.0(247)
300-400만원 미만	36.5(95)	63.5(165)	100.0(260)
400-500만원 미만	36.2(55)	63.8(97)	100.0(152)
500만원 이상	40.1(77)	59.9(115)	100.0(192)
전체	40.0(471)	60.0(706)	100.0(1,177)

8.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

- 약 67.4%가 건강보험 혜택 증가를 위한 보험료 인상 반대
 - － 농촌지역일수록 인상 반대 비율 높음

〈표 8-1〉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도시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건강보험료 인상, 본인부담 감소	건강보험 혜택 증가위한 보험료 인상 반대	계(수)
대도시	33.5(180)	66.5(357)	100.0(537)
중소도시	33.0(162)	67.0(329)	100.0(491)
농어촌	28.3(43)	71.7(109)	100.0(152)
전체	32.6(385)	67.4(795)	100.0(1,180)

－ 고령층일수록 인상 반대 비율 높음

〈표 8-2〉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연령대별)

(단위: %, 명)

구분	건강보험료 인상, 본인부담 감소	건강보험 혜택 증가위한 보험료 인상 반대	계(수)
20-29세	47.3(104)	52.7(116)	100.0(220)
30-39세	39.2(103)	60.8(160)	100.0(263)
40-49세	23.8(64)	76.2(205)	100.0(269)
50-59세	26.3(55)	73.7(154)	100.0(209)
60-69세	32.8(39)	67.2(80)	100.0(119)
70세 이상	20.0(20)	80(80.0)	100.0(100)
전체	32.6(385)	67.4(795)	100.0(1,180)

–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인상 반대 비율 높음

〈표 8-3〉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건강보험료 인상, 본인부담 감소	건강보험 혜택 증가위한 보험료 인상 반대	계(수)
100만원 미만	21.5(26)	78.5(95)	100.0(121)
100-200만원 미만	28.6(54)	71.4(135)	100.0(189)
200-300만원 미만	31.4(76)	68.6(166)	100.0(242)
300-400만원 미만	36.1(93)	64.0(165)	100.0(258)
400-500만원 미만	38.0(57)	62.0(93)	100.0(150)
500만원 이상	36.0(67)	64.0(119)	100.0(186)
전체	32.6(373)	67.5(773)	100.0(1,146)

9.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

- 63.6%가 현행수준 유지에 찬성
 -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 확대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 9-1〉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직업별)

(단위: %, 명)

구분	고용보험료 인상, 보장수준 확대	현행수준 유지	계(수)
자영업자 등 ¹⁾	35.7(174)	64.3(314)	100.0(488)
무급가족종사자 등 ²⁾	42.6(40)	57.5(54)	100.0(94)
비취업자 ³⁾	44.6(41)	55.4(51)	100.0(92)
학생 등 미취업자 ⁴⁾	34.2(153)	65.8(294)	100.0(447)
전체	36.4(408)	63.6(713)	100.0(1,121)

주: 1) 자영업자, 고용주, 상용근로자; 2)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3) 구직 및 비구직활동 비취업자; 4) 미취업자, 학생;

－ 저소득층일수록 현행수준 유지에 찬성

〈표 9-2〉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소득수준별)

(단위: %, 명)

구분	고용보험료 인상, 보장수준 확대	현행수준 유지	계(수)
100만원 미만	26.4(28)	73.6(78)	100.0(106)
100-200만원 미만	39.0(69)	61.0(108)	100.0(177)
200-300만원 미만	34.9(81)	65.1(151)	100.0(232)
300-400만원 미만	40.3(98)	59.7(145)	100.0(243)
400-500만원 미만	40.7(61)	59.3(89)	100.0(150)
500만원 이상	32.2(59)	67.8(124)	100.0(183)
전체	36.3(396)	63.7(695)	100.0(1,091)

10. (비미취업자) 임금수준 vs.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비 미취업자가 안정성 중시
 - 남녀 간 차이 없음

〈표 10-1〉 비 미취업자 임금수준과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견(성별)

(단위: %, 명)

구분	임금수준	일자리 안정성	계(수)
남성	20.8(20)	79.2(76)	100.0(96)
여성	25.4(18)	74.7(53)	100.0(71)
전체	22.8(38)	77.3(129)	100.0(167)

11. (비미취업자 희망급여수준

○ 희망급여수준은 월 약 208만원

– 대도시에서 다소 높고, 남녀 간 차이 없음

〈표 11-1〉 비 미취업자 희망급여수준(성별)

(단위: 만원, 명)

구분		N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167	207.9	79.8
도시유형	대도시	90	221.9	95.8
	중소도시	64	191.3	51.9
	농어촌	13	193.1	51.2
성	남성	96	213.5	90.9
	여성	71	200.3	61.5

12. (비미취업자 취업희망직종

-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공무원이 가장 원하는 직종
- 남녀 간 비슷한 양상이나 여성이 전문가, 공무원 희망 비율 다소 높음

〈표 12-1〉 비 미취업자 취업희망직종(성별)

(단위: %, 명)

구분	사무 종사자	공무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관련기능 종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농림어업 종사자	계(수)
남성	28,1(27)	19,8(19)	12,5(12)	6,3(6)	21,9(21)	9,4(9)	2,1(2)	100,0(96)
여성	28,2(20)	25,4(18)	5,6(4)	1,4(1)	29,6(21)	9,9(7)	-	100,0(71)
전체	28,1(47)	22,2(37)	9,6(16)	4,2(7)	25,2(42)	9,6(16)	1,2(2)	100,0(167)